

교육부, 학교 독서교육 강화... 초3~4·중1·고1 '집중학년' 지정

학생 독서율 하락·문해력 저하 대응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매년 1000개 교과수업 모델 발굴

학생 독서율 하락과 문해력 저하에 대응해 교육부가 교과 수업과 독서를 연계하는 학교 독서교육 강화에 나선다. 초3~4, 중1,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고,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발굴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를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 체계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생 독서량 감소와 문해력 저하 징후를 정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독서량은 2023년 36.0권에서 2025년 31.5권으로 줄었고, 평일 독서시간도 같은 기간 82.6분에서 70.3분으로 감소했다. PISA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에서는 한국 학생의 '정보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이 25.6%, OECD 평균 47.4%보다 낮았다.

◆ 초3~4·중1·고1 집중 지원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독서를 교과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과 관련 독서를 읽고 탐구·토론 등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

업 교수·학습모델을 공모해 발굴한다.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도 운영한다. 기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수업 중심 모델로 전환해 2030년까지 매년 40개교를 지정한다. 선도학교는 독서 기반 수업과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16차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초3~4, 중1, 고1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된다. 초3~4는 '읽기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중1은 교과 학습량 증가와 함께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고1은 진로와 전공 탐색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다.

◆ 독서로·학교도서관 기능 강화

학교 일과 중 책을 읽는 문화도 확산한다. 교육부는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방학 중에도 독서가 이어지도록 2027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월 5권 이내 전자책 대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독서로DLS'에는 AI 기반 도서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학생이 '독서로'에 기록한 독서활동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란에 자동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도서관 역할은 강화한다. 2024년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까지 높아졌지만, 사서교사 배치율은 16.47%에 그친

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 법·제도 기반 정비

교육부는 독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함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도 독서교육 전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교육부는 2026년 독서교육 추진 예산으로 134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7년 소요 예산안은 253억6000만원 규모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의무교육 등에 밀려 안정적인 시수 확보가 어렵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학교 교육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학교 과학실 'AI·디지털' 입는다

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탐구수업 확대
학교당 1개 이상 지능형 과학실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센서와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탐구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확대하고 미래형 과학·수학·융합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K-STEM 기반 AI·디지털 미래형 과학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K-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탐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교육 정책이다.

핵심은 학교별 디지털 탐구 환경 구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 최소 1개 이상의 지능형 과학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과학실에는 디지털 센서, 데이터로거, 디지털 현미경, AI 분석 도구 등이 지원된다.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관찰과 실험, 분석, 토론으로 이어지는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간 디지털 탐구도구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K-STEM Bank'도 운영한다. 융합과학교육원, 11개 과학교육센터, 수학과융합교육센터 등이 보유한 과학·수학·AI·SW 교구와 탐구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검색하고 대여할 수 있다.

교사 연수도 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탐구도구가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디지털 과학탐구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실천 조직도 꾸린다. 서울시교육청은 K-STEM Bank 활용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K-STEM 과학·수학·정보 CREW'를 운영한다. 교사단은 디지털 탐구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와 콘텐츠 등을 제작해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과학·수학·융합 수업 방식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총원 절차 착수

산업재해 예방·노동권 보호 강화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총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핵심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2026년 하반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이번

공채 인원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맞춤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서울런' 지원대상 대폭 확대

소득기준 등 완화... 5만명 추가 이용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지원대상을 기존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을 새로 포함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원대상을 넓혀 서울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약 5만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플랫폼이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넓어진다. 새 지원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보훈

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가구는 3자녀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서울런 소득 기준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같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맞췄다. 교육복지 정책 간 지원 기준을 맞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재혼가정의 자녀 산정 기준도 정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운영 결과와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2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런 진로캠퍼스 IoT 과정(IoT(모디플러스) 과정에서 센서와 모듈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는 소득 기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교육 지원에서 빠질 수 있었던 청소년까지 서울런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자격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달 '2026 그린에너지'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환경·에너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그린에너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엠이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기업과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B2G 2B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정·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기후테크 등 환경·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패러다임을 조망할 수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사는 130개 사가 참여해 첨단 기술과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수출 및 구매 상담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기업 판로 개척을 돕고 또한 '그린에너지텍' 및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가 동시 개최되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는 교류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장은 "2026 그린에너지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참가기업과 관람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321@